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맹견관리 강화

### 동물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20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보호·복지 제도가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공포돼 오는 2023년 4월 27일부터 달라진 동물보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을 반영해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고 동물 학대 및 맹견 안

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선, 오는 2023년 4월 27일부터는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되고 동물영업체계가 개편된다. 민간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동물학대 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대 200시간의 상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등록제였던 반려동물

수입업·판매업·장모업은 허가제로 바뀐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제도권 밖에 있던 유실·유기 및 피학대동물을 입시로 보호하는 일정규모 이상 민간 동물보호시설도 시·군청에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특히,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태욱 도 동물정책과장은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 후 31년만에 법률이 대폭 개정됐다”며 “바뀌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반려동물 영업장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에서는 추후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효상 기자

## 전북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위생점검 활동 등 공로 인정

전북도가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전국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1년 식품안전 인프라,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정책 이행률 등 식품안전관리와 코로나19 방역관리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도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대상 코

로내9 방역활동과 도내 식품업소 위생점검 및 합동단속으로 식품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 밀집지역 등 도·시군·경찰청 합동점검과 자체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우수업소에 표창 수여, 방역관리 현장 홍보로 자율 방역 준수를 독려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음식점 생활

방역 칸바이·파티션 등을 7,973개소 지원했고, 외식업소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설개선용자 1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도내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업소 50,583개소 점검과 338명의 소비자직접 위생감사원을 활용한 위생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식품 3,487건 수거·검사 등 식품안전 지도·점검의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이경영 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포상은 코로나19 방역관리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시·군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민의 관심으로 이루어

진 결실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만남과 이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도내 음식점 이용도 활발해질지 기대하며, 식품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 제조·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준수 음식점 1,517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 우수한 사후관리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우수 지자체 평가 전국 2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2020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종류 예방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유효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번째 청원 답변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안 공모 선정

### 도, 전국 유일 노후 목재가공시설 개선·신규 자동화설비 도입 납원·무주 등 목재 생산·가공 거점도시기반 마련 기대

전북도가 산림청에서 주관한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안 지원사업’ 공모에 납원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 ‘22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지역 목재유통센터내 노후된 칸베이어 등 목재가공시설을 개선해 국산목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산림청 공모는 산림조합에서 운영 중인 전국 18개 목재유통센터 및 목재집하장을 대상, 타당성 및 ppt 발표평가 등을 통해 납원 산림조합을 최종 선정(1개소)했다. 본 사업을 통해 신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국산목재 생산량 제고’와 ‘안전사고 발생 요인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은 지

난 1990년에 조성해 건축재, 원주목, 우드칩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전라권과 경상사남권 목재생산 거점지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특히, 금년도에 동일 위치에 비이용 산림지원화 사업’을 30억 원 투입해 조성할 예정으로, 금번 공모에 선정된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안사업과 연계하면, 동반 상승효과를 것으로 기대된다.

황상국 도 산림복지과장은 “도내 동부권에는 목재펠릿공장, 목재문화체험장, 톨빌리지센터 등 목재관련 생산·가공·교육·체험시설이 10여 개소가 구축돼 있어 미래 목재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 도,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건립 공모 선정

### 2025년에 완공 예정

전북도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하는 ‘한국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관련 인력의 전문화된 교육연수 실시로,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 실현, 장애인고용 관련기관 및 고용사업주의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공모사업’ 유치 대상지를 지난달 29일 최종 선정했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사업계획 수립 방향 공모 대응 전략, 시설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저히 사전 준비해 왔다.

2017년 사회복지법인 자립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잔여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장애인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

렴, 해당부지를 장애인고용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15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전북도와 전주시, 전북연구원 이 사업 준비 단계부터 현장조사, 발표평가까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적극 대응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해당 부지는 4만2,438㎡(1만2,837평) 면적으로, 최소 29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향후 후보지 주변으로 사업 확장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수원 건립 예정부지 인근은 모두 평지의 전과 답으로 구성돼 있고, 동·서·남쪽 방향으로 약 6만400㎡ 정도의 매우 넓은 공간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유효상 기자

## 전북도, 해양 환경 정화에 ‘총력’

### 올해 총 70억 원 투입해 해양 쓰레기 신속 처리

### 바다 환경지킴이·전담인력 확보·민관합동 캠페인 등 방안 활용

전북도가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섬 지역·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쾌적한 바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날 도는 70억 원을 투입해 해양오염의 주원인이자 자연 경관을 저해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하구(금강하구 등) 및 해안가 등 유심지역(개야도, 고군산군도, 연도, 명사십리, 격포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방침이다.

특히, 어촌마을 환경정비 및 바다 환경지킴이 사업추진을 통해 상시 수거·처리가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110명)을 확보해 해안가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할 예정이다.

또한, 5월 바다의 날 행사와 병행해 도 주관으로 해양쓰레기 밀

집구역을 선정하고, 관계기관(시·군, 해경,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정화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도에서 직접 운영 중인 어장 정화선을 활용해 해역의 침체 쓰레기(폐양식 기자재, 페어구, 어장경운 등)를 연말까지 수거하는 등 어장 환경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김호덕 도 해양항만과장은 “정화 활동을 통해 연례적인 해양쓰레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해 깨끗한 해양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바다지킴이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3년간 109억 원을 투입해 총 12,34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유효상 기자

##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실시

### 도, 총 5억3400만원 규모

전북도가 사회적경제기금을 대상으로 총 5억3,400만원 규모의 2022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사업은 도내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금(최대 5천만 원) 및 시설자금(최대 1억 원)을 연 금리 3% 이내,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타금융기관의 고금리 융자금을 이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차보전사업도 추진, 1년간 연 금리 최대 2% 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신청은 오는 5월 16일까지 도 기금 중개기관인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신청 가능하며, 사회적가치 평가와 재무성과 평가 등 단계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6월중 최종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기금사업에 대한 이해와 융자실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 사업설명회를 5월 4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개최해 융자사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http://www.bsccorp.or.kr)에 공지된 공고계획 참고 및 전화(063-213-2246)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1년 조성된 기금 5억3,400만 원은 9개 기업에 지원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었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비와 같은 자금 조달로 기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유효상 기자

### 전북 Job+ 카페 운영

전북도일자리센터는 올해부터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일자리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커피트러(이하, 전북 Job+ 카페)를 운영한다.

전북Job+카페는 지역행사, 대학·특성화고교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로, 도민들의 구직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취업 상담과 일자리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취업 컨설팅과 필요한 일자리 지원사업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 도내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들의 체감 제고를 통해 도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효상 기자

구독·광고 문의 063-288-9700

## 수산물 원산지미·거짓 표시단속 실시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대응

전북도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및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5월 2일부터 5월 27일(4주간)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품목은 일본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명게, 활방어 등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미트와 전통시장 및 음식점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홍보용 전단지 배포에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부정 유통이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거나, 국민핫이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유효상 기자

## 도, 안전·깨끗한 상수원 관리 ‘총력’

전북도가 도민들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보호 및 수질보전을 위해 7개 시·군 10개 소가 지정돼 있으며, 활력제가 증가하는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유입하천 오염원 관리실태 및 비상시를 대비한 방제장비 보유 현황 ▲상수원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및 입지제한 사항 준수여부, ▲기타 시설·장비·인력확보 여부 등이다. /유효상 기자

도는 행정각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및 금지행위에 대해 자세한 안내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오염 사고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오염물질을 차단해 보호구역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기름제거막 등 방제장비를 충분히 보유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금지행위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 조치여부와 상수원 관리 계획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시·군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유효상 기자

**제42회 장애인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가 아래와 같이 실시되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참가자 대상: 만16세 이상 장애인 누구나
- 참가예외: 전국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 가수활동자 제외
- 참가접수: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증명서)(곡명, 성명, 전화, 주소 기입, 개인,그림 촬영)
- 접수방법: 방문, 전화(063)286-6678, 팩스(063)287-6676  
\* 방문주소: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 5층
- 예선: 2022.06.05.(일) 오전 10시(동남문화광장)
- 본선: 2022.06.05.(일) 오후 2시(동남문화광장)  
- 개회식, 공연, 경연, 행운권 추첨 등

○ 일시: 2022.06.05.(일) 오전 10시  
○ 장소: 전주 동남문화광장(동남문 옆)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 주관: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 전주매일신문사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  
☎ 063-286-6678 ☎ 063-287-6676